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4)

1.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의견서 제출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9월 3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함.¹⁾
- o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4일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구분하고, 기존 백색국가 중 28개국을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또한 경제산업성은 의견서 가운데 △ 고시 개정 이유 △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 이유 △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한국 정부 동향]²⁾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일본의 CISTEC(전략물자 담당기관)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 또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1) 経済産業省, 「韓国の告示改正に関して意見及び質問を提出しました」(2019. 9. 3). 및 「韓国の日本優遇除外は「根拠ない報復措置」経産省が意見表明」『NHK NEWS WEBS』(2019. 9. 4).

2)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보복조치 아니다”... 日 제출의견 반박」『연합뉴스』(2019. 9. 4).

2. 수출규제 추진 및 경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³⁾

□ [일본 정부 동향]

-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수출심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수출이 지연될 수도 있으나,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수출 안전이라면 순차적으로 수출 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을 포함,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毎日新聞).
-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 내 여론이 반발, 일본 여행의 취소 및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였음.
- 또한 일본 정부는 연내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및 한중일 정상회담 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함.

3. 한국의 국제여론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⁴⁾

□ [일본 정부 동향]

- 세코(世耕)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를 국제회의에서 제기하는 것과 관련, “양자간 문제를 다자간의 논의의 장에서 발언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였음(産経新聞).

3) 「きしむ日韓：輸出規制2カ月（その1） 強すぎた「アラーム」」 『毎日新聞』(2019. 9. 4) 및 「きしむ日韓：輸出規制2カ月（その2） 首相「時間かけるしかない」 徴用工「打開策」不発、持久戦に」 『毎日新聞』(2019. 9. 4)

4) 「輸出管理厳格化 経産相、韓国の批判牽制「多国間の場で発言控えよ」」 『産経新聞』(2019. 9. 4).